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및 산하 기관 대표자들이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전북도의회, 오늘 임시회 개최

25일까지 10일간... 문학진흥 조례안 등 24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은 16일 제 36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까지 10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의는 전북도청 및 전라북도 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의, 현장의정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영일(순창), 김병지(전주8), 김기영(익산3), 황영석(김제1), 조동용(군산3), 김중식(군산2), 박용근(장수), 김철수(정읍1)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김진성 기자

## 보훈·위탁병원 의료서비스 개선을

“서비스 서로 달라”...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 건의안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의료서비스가 서로 달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원주 제1선거구)이 16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을 통해 밝혀졌다. 송 부의장은 이 건의안을 통해 "국비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법정 비급여 부분을 국비 지원하는 것



과 달리 위탁병원은 법정 비급여 대부분이 지원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비진료자에게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법정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송 부의장은 "감면진료자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은 본인부담금의 30~60%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반면,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의 60%정도를 지원하고 약제비 지원을 제외하여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자 연평제한을 폐지하고 약제비를 차등 없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 “日, 우리 정부에 중대한 도전”

문 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서

“日, 강제징용 판결 이유로 내세우다 지지 못 언자 말 바꿔 韓 기업, 국산화 길로 갈 것...日 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근거로 전략물자 발판출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간의 인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발판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

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강제 징용 판결과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양국이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란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함께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상호 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 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

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일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야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 숭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건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 나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뉴스1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정동영 “공시가 산정근거·기준 낱낱이 공개를”

정동영 민주당 대표가 15일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일 44만 가구에 재산상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며 “세금의 공평과세가 핵심인데 (국토교통부가) 최근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공시가격을 통째로 반복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생긴 이래 최초로 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반복하면서 사회적불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개 동 200세대의 공시가격을 30억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을 통째로 2억씩 깎아 28억으로 정정했다”며 “후무로 전양상이 아파트에서는 12년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 2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기는 사건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기준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